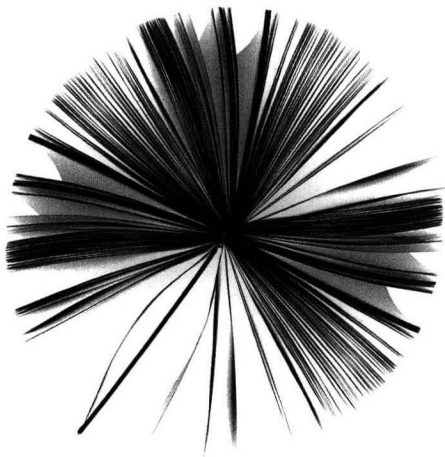


# 학문과 현실 사이, 대학출판부

「수익성 추구·학술정보생산의 「두 마리 토끼」  
정책성 살리며 기획·편집 전문성 높여가야」



밖에서 보기에 대학출판부는 '속편한 곳' 이었다. 학기 초만 되면 교재를 팔아 1년 예산을 한꺼번에 거둬들이기 때문이다. 이 돈을 가지고 대학교수들이 요구하는 학술서적을 내면 그것으로 한 해 농사는 끝인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몇 년 전부터 상황이 변하기 시작했다. 한국사회에 불어닥친 네트워크와 정보화는 대학의 변화를 요구하기 시작했다. 또한 사회가 다원화되고 정부의 적극적인 신자유주의 정책 수용으로 '무한경쟁시대'에 돌입하면서 대학 역시 개혁이라는 시대적 화두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 학제개편·무한경쟁 등 환경 변화 직면

경북대 전 출판부장이었던 고 이호철 교수는 "개혁의 새 물결이 한국 사회를 전반적인 변화의 시대로 이끌고 있는 중"이라며 "대다수의 대학들은 이러한 개혁의 바람과 대학간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스스로 변화를 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어려운 현실에 직면해 있다"고 대학출판부의 변화의 필요성을 역설하기도 했다. 특히 대학출판부로서는 학제개편으로 교양필수 과목이 사라짐으로써 교재판매수입을 보장할 수 없게 된 것이다.

결국 이러한 환경적인 변화는 요지부동이던 대학출판부의 변화를 이끌어냈다. 교수신문은 최근 '지방대출판부 약진 두드러져... 良書의 길밖에 없다' 제하의 기사에서 지난 5년간 문화관광부 추천도서목록을 분석했다. 이 기사에 따르면 2000년, 2001년, 2002년 6종, 5종, 3종에 머물렀던 대학출판부 실적이 2003년 28종, 2004년 30종으로 경증 뛰었다.

이 신문은 이같은 현상에 대해 "문광부 추천도서가 2003년부터 100종에서 350종으로 3배 이상 늘어났다는 점이 그 직접적인 원인"이라며 "양서의 비율 10퍼센트를 대학출판부에서 담당하게 되었다는 점은 고무적인 측면이며, 그 이면엔 변화를 모색하는 대학출판부의 노력이 숨어 있다"고 평가했다. 또 올 1월에는 서울대출판부가 '대중에게 한발 다가선다'는 목표로 교양도서 '베리타스' 시리즈 4종을 출간하자 언론에서 '대학출판도 사회의 변화와 독자의 요구에 동참하고자 한다'며 반겼다.

## '최근의 변신, 자연 진화일 뿐' 폄하 시각도

하지만 대학출판부의 이러한 변화에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도 적지 않다. 한 인문출판기획자는 대학출판부가 최근 보여주고 있는 변화는 '자연 진화'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그 내부를 들여다보면 구성원들의 마인드나 대학당국의 비전은 전혀 달라진 게 없다는 것이다. 현재 대학이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는 고질은 '조직의 종속성', '비전문성', '재정부족' 등이란 지적이다.

K대학 출판부장을 맡은 바 있는 J교수는 대학교수들이 대학출판부 편

집자 알기를 우습게 안다며 '조직의 종속성'의 문제점을 토로했다. "대학출판부 안에서 직접 일을 해보니 이게 의욕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막상 교수들에게 편집기획자로서 제안을 하면 그쪽 요구는 다 필요 없으니, 그냥 있는 그대로 내달라는 것입니다. 일부 교수들은 워낙에 막무가내이다보니 거부하면 뒷감당이 안 될 것 같아 그냥 들어주고 말았습니다."

또 J교수는 "대부분의 교수들이 대학출판부에서 책을 낼 때는 교수 평가를 염두에 두며 자리 보전의 한 도구로 인식하고 있을 뿐, 학문적 성취와는 거리가 멀다"고 안타까워했다. 그러다보니 한 해 100종이 나올 경우 그 중 7, 80종은 아무런 검증 없이 나오는 책이라는 것이다.

### 지원부서 성격 탈피, 전문성 강화해야

'출판'을 이해하고 있는 출판부장을 찾기도 쉽지 않은 게 사실이다. 서울대(4년)를 제외한 대부분의 대학이 2년 순환보직제를 택하고 있다. 일부 대학은 다른 행정부서에서 발령받아 오거나 아예 겸직을 하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출판에 마인드가 없는 교수나 임직원이 출판부 책임자로 있다보니 전문출판사로서 방향설정엔 어려움을 겪는 것은 당연하다. 또한 대학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출판부를 한직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다.

한 대학출판부는 정관에서 출판부의 설치목적은 "본 대학의 교육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학내의 모든 간행물과 학습연구서, 대학교재, 부교재, 일반교양서, 논문집 등의 간행을 통해서 대학의 발전과 학문의 풍토를 조성하고 우리나라 출판문화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다르다. '출판문화 향상에 대한 기여'가 목적이라고 하지만 실제 업무는 여느 인쇄소와 큰 차이가 없는 경우가 적지 않다. 독자적인 조직이라기 보단 하나의 '지원부서'의 성격이 강한 셈이다.

K대학의 한 출판부 직원은 "지금은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 출판부의 보직순환이 많이 줄어들고 있다"며 "하지만 여전히 조교들이 임시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고, 애초 출판에 관심을 가지고 있거나 꿈이 있는 사람이 없다보니 큰 효과를 얻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 대학도서관·교수진 참여하는 원활한 피드백 절실

대학도서관도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대학도서관마저 대학출판부에서 발행되는 책을 구입하는 데 소극적이기 때문이다. 건국대학교 주홍균 출판부장은 "대학출판부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그 뜻을 같이 하는 대학도서관이 대학출판부에서 출간되는 학술서적을 적극 구입해 줘야 한다"며 "하지만 현재 대학출판부의 책을

구매하는 곳은 강원대학교 도서관밖에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현실적으로 대학도서관이 대학출판부 도서구입에 소극적인 이유는 공개입찰제 때문이기도 하다. 소명출판사 박성모 대표는 "공개입찰을 통해 가장 낮은 단가를 써낸 업체가 도서관에 책을 납품한다"며 "이들 업체는 낮은 단가를 보전받기 위해 학술서 등 가격이 비싼 책은 납품 목록에 최소한 반영하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또한 도서관의 도서구입목록 기준도 도서관의 주이용자인 학생들의 신청목록을 반영하다보니 이러한 현상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결국 현재 대학출판부의 문제는 '교육·연구기능의 강화(교수집단) → 학술출판의 활성화(출판부) → 학술정보의 즉시 수집과 개발(도서관) → 정보의 활용과 재생산(교수집단)'의 피드백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는 총체적인 문제인 셈이다.

